



의안번호

제48호

##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17. 6. 12.

#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

의안 번호	제48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6. 12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14476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됨에 따라,
- 나. 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·이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중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, 제명을 「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」로 함(안 제명)
- 나.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 
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4조)
- 다. 종전 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로 이관함 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 [감사담당관-3415호(2017.5.18.)]
- (2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 [사회복지과-22669호(2017.5.10)]
- (3) 규제심사: 해당없음 [예산담당관-4118호(2017.5.1.)]
- (4) 입법예고

가. 예고기간: 2017.4.28. ~ 2017.5.18 (20일)

나. 예고결과: 의견없음

- (5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- (6) 국민신문고 정책토론(전자공청회)

「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규정」 제25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정책  
토론 의제로 등록 후 주민의견 수렴

가. 토론기간: 2017.4.28. ~ 2017.5.18 (20일)

나. 토론결과: 의견없음

- (7) 충청남도 소관실과: 세무회계과(041-635-3637)

## 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#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법령과의 관계)** 논산시 시세(이하 “시세”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**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”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**제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**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규정에 따른다.

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세 무 과 장	진 용 민
	지방소득세팀장	윤 여 창 (746-5441)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☐ 해당없음

**2. 비용추계결과**

☐ 해당없음

**3. 작성자**

세무과장    진 용 민

**■ 「지방자치법」**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■ 「지방세징수법」**

제105조(채납처분 유예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
  2.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·승인·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채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채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.